



##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 중소기업도 신용관리 필수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입찰기업 심사에서 '재무 상태 부문에 대한 평가'를 기존에 사용했던 재무제표 대신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으로 대체 운용하기로 확정했다.

경영상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적격심사' 제도에 신용평가등급이 채택됨에 따라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등을 원하는 업체는 반드시 한국기업데이터 등 기업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신용평가등급의 적용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어 기업의 신용 관리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적격심사에는 물론 금융여신, 기업간 상거래가 신용점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기업전문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관계자는 변화하는 신용환경에서 중소기업경영자들도 다음의 기업 신용관리 5계명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① 기업 재무·회계 상태를 투명하게 작성하라
- ② 대표이사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라
- ③ 연체는 어떤 형태든 곤란하다
- ④ 정기적으로 신용을 평가하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라
- ⑤ 거래처의 신용상황도 수시로 점검하라

또 이 관계자는 올바른 신용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업신용평가기관의 활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 중소기업 특별지원 자금 연말까지 연장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등 벤처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우선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운용하기로 돼 있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기일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금 1조8000억원은 영업점장 전결로 원금일부 내입 없이 1년간 특별상환유예한다. 또한 산은은 올 2월부터 시행해 온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대책'을 대폭 개선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뉴스타트(New Start) 벤처펀드'의 투자대상을 설립 후 2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및 양산체제 구축자금에서, 설립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과 설립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자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은 가급적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업체당 지원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력 평가대출'도 업체당 한도를 시설자금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운영자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무역구제 제소시 소요비용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으로부터 덤핑 및 수입금지, 지적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제소시 소요비용(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제소(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제소건당 총 소요금액의 70% 이내, 최대 7,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자금은 2004년에 총 소요금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했고, 작년에 일본산 PVC 플레이트의 덤핑수입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예비판정을 받은 (주)크라온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로 피해가 인정된 (주)부흥산업사 등 2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문의 \_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통상팀

(02) 2124-3223, Fax : (02)3775-1981, chanwoo2@kfsb.or.kr